한국에서의 자산 축적과 자산 격차[1)]

Asset Accumulation and Wealth Inequality in Korea

전병유 |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부교수

한국에서의 자산 축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순자본스톡은 지난 20여 년간 약 8배 증가하였으며 소득 대비 자산 비율인 이른바 피케티 β값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자본수익률은 5~7%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소득증가율이 정체되었기 때문이다. 자산 축적에서는 저축이나 상속·증여보다 자본이득이나 자산가격 상승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빈곤층의 낮은 저축률은 자산 격차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의 자산 격차는 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가계조사를 활용한 자산 격차 지표로는 최상층으로의 집중도가 매우 큰 자산 격차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과세 자료로 분석할 경우 자산 격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행정 자료를 활용하여 자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자산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파악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파악과 과세, 자산가격의 안정화, 불로소득으로서의 지대에 대한 과세, 빈곤층의 저축과 자산 형성 기반 확충, 상속·증여에 대한 엄밀한 파악과 과세 등이 요구된다.

1. 들어가며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개발 연대를 거치며 저축과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축적된 자산의 규모가 크게 확대된 상태이다. 자산은 노력으로 축적되지 않는(unearned) 성격이 있어 자산 격차에 대해 개인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자산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산

1) 이 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과제인 장지연 외(2018)에 게재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축적과 자산 격차를 초래하는 원인에 대한 연구도 미흡하다. 자산 축적과 격차는 경제성장과 저축, 인구와 가족 구조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동시에 다양한 정책의 영향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정책이 자산 축적과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국민의 자산 불평등 인식 수준에 비해 자산 격차에 대한 정책적 고려나 정책 대응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소득 격차나 사회서비스 수요 충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을 어떻게 고려해야 할지에 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에서의 자산 축적과 자산 격차의 현황 및 구조를 기본적인 통계 지표를 통해 검토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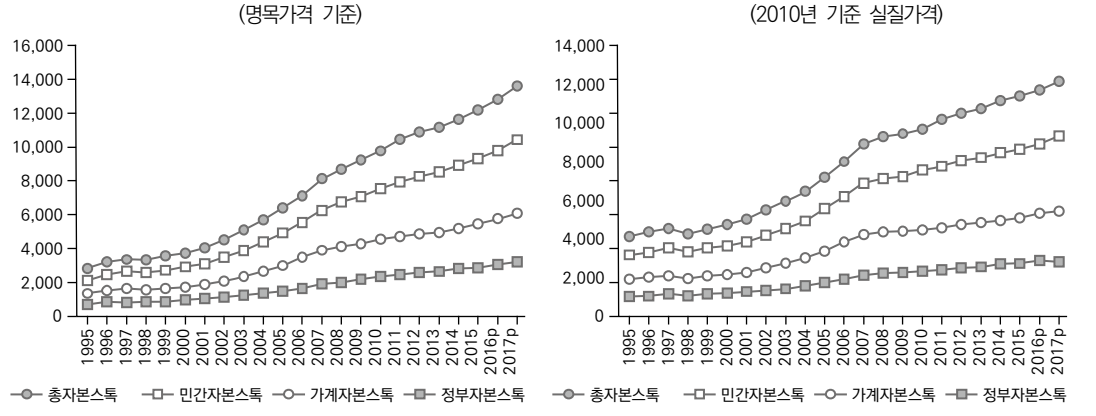
2. 자산 축적의 동학

1997년 이전 한국 자본주의는 한국전쟁과 농지 개혁에 기인하는 '재산(Property)의 해체'를 토대로,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과 기회 창출을 통해 불평등 심화의 사회적 균열 효과를 억제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축적된 자산이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의 자산은 개발 연대가 마무리된 90년대 중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축적되었다. 한국의 순자본스톡은[2] 2010년 실질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그림 1), 1995년 4131조 원에서

그림 1. 부문별 순자본스톡과 1인당(1가구당) 순자본스톡 추이

(단위: 조 원,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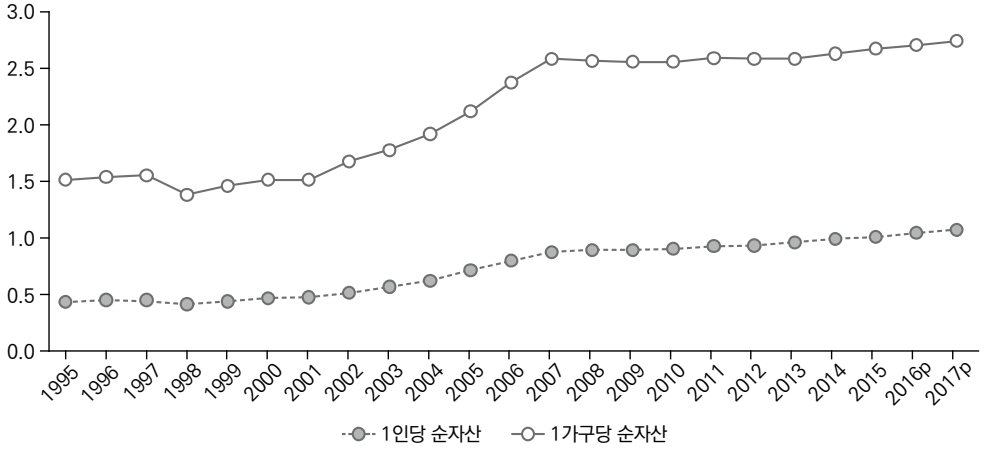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 전병유(2018) 〈표 3-1〉에서 재인용.

2) 한국은행은 국가 전체 자산 규모를 추정해 '국민대차대조표'를 발표하고 있는데, 생산자본뿐만 아니라 비생산자본까지를 포함한 수치는 1995년 이후에 대해서만 발표하고 있다.

그림 2. 1인당 및 1가구당 순자본스톡 추이(2010년 기준 실질가격)

(단위: 억 원)



주: 인구수와 가구원 수는 통계청(kosis.kr)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였음.
자료: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 전병유(2018) 〈표 3-2〉에서 재인용.

2017년 말 현재 1경 3817조 5000억 원[국내총생산(1730조 4000억 원)의 8.0배]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순자본스톡에서 민간 부문이 약 75%이고, 이 중에서 가계 부문이 45%, 정부 부문이 25% 정도이다. 정부 부문의 순자본스톡 비율은 외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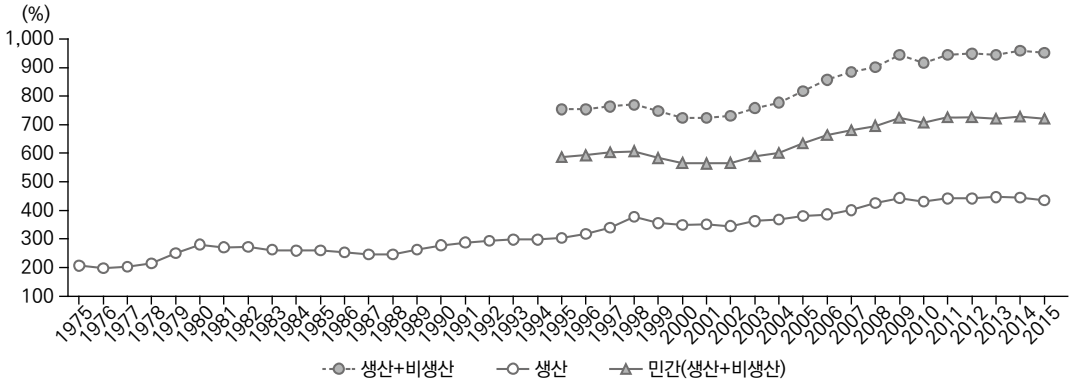
국민계정의 제도 부문에서 가계 부문에만 한정해 개인과 가구의 자산 축적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2), 2010년 불변 가격 기준으로 1인당 순자산이 1995년 4300만 원에서 2017년 1억 6000만 원으로, 1가구당 순자산은 1995년 1억 1500만 원에서 2016년 2억 780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1인당 순자산과 1가구당 순자산은 2002~2007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이 기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케티는 자산 축적과 관련해 성장률(g), 저축률(s), 자본수익률(r), 소득자본비율(β), 자본분배율(α) 등 거시 변수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역사적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소득 대비 자산 비율인 β값(income-wealth ratio)에 주목하였다. 피케티의 β값은 순자산 대비 국민순소득의 비율이다.

피케티의 자본주의 제1 기본법칙: $\alpha = r \times \beta$

피케티는 β값이 커져도 자본수익률(r)이 크게 낮아지지 않아 자본분배율(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β값이 커져도 자본수익률(r)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자본노동 대체탄력성이

그림 3. 국민순소득 대비 순자본스톡의 비율(β값) 추이



주: 민간 부문은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가계 및 비영리 등을 포함하고 정부 부문을 제외한 것임. 정확한 방식으로 피케티의 β값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자본 항목에서 법인 부분을 제외하고 고정자본소모를 포함해야 하며, 금융자산을 포함해야 함.
자료: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와 국민계정 자료; 전병유(2018) [그림 3-1]에서 재인용.

1보다 크다는 의미이다.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1보다 작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피케티는 역사 경험적으로 1.3~1.6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소득 자본비율(β)이 장기적으로는 저축률을 성장률로 나눈 값(균제 β =steady state β)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자본주의의 제2 기본법칙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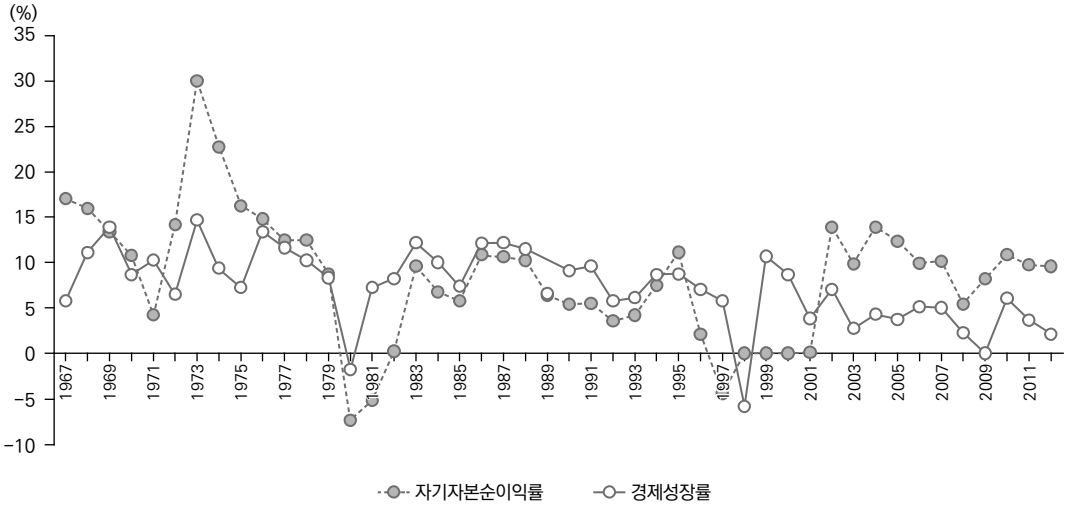
자본주의 제2 기본법칙: $\beta \rightarrow s$(저축률) ÷ g(성장률)

이러한 두 가지 기본법칙을 전제로 하여 피케티가 주장하는 바는, 자본수익률이 소득증가율(경제성장률)보다 커져 β값이 상승하고 이것이 자본분배율(1-노동분배율)의 상승, 즉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것이다.

피케티의 가설: $r > g \rightarrow \beta$ 상승 → α의 상승

[그림 3]의 국민순소득 대비 순자본스톡의 비율(β값) 추이를 보면, 자산이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피케티의 β값(자산-소득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β값은 보다 장기간의 자료가 가능한 생산자본스톡만을 볼 경우, 1970년대 후반, 외환위기 직전인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중반에 빠르게 증가하였다. 국민소득(NNI) 대비 민간의 순자본스톡(생산자본과 비생산자본) 비율은 2000년대 초반 560% 수준에서 2009년 730%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경제성장률과 자본수익률의 추이를 나타내는 [그림 4]에서 1987년 이후 β값의 증가는, 소득과 자산이 같이 증가하되 자산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나타난 현상이라면, 2000년대 초중반 이후의

그림 4. 자본수익률과 경제성장률의 추이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국민계정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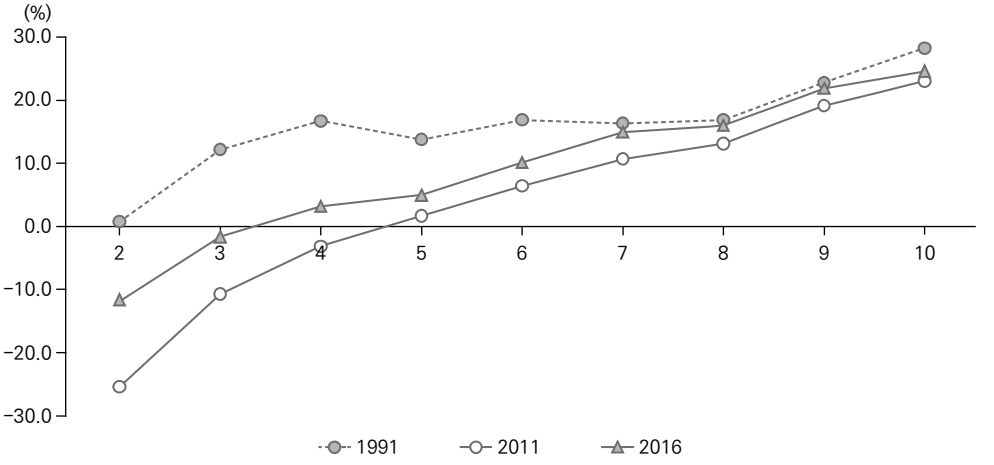
β값 증가는 소득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정체되면서 자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케티의 연구 이후 자산이 증가한다는 사실 자체는 대체로 수용되고 있으며, 그렇다면 누가 이를 어떻게 축적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개인 자산(예: 주택, 주식, 은퇴연금 등)은 일반적으로 신규 자산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는 저축 또는 실현·미실현 자본이득을 함의하는 자산 재평가를 통해 축적될 수 있다. 이러한 자산 증가와 자산 격차의 확대를 고소득층의 저축 성향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입장(물량효과)과 주택 또는 자산 버블에 따른 자본이득이나 지대에 따른 것으로 보는 입장(가격효과) 사이의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Kumar(2016)는 미국에서 상위 1%의 저축 증가가 자산 불평등을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하였다. Milanovic(2016)도 상위 노동소득자와 상위 자본소득자가 점점 더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고소득 부모가 저축과 주식 투자로 엄청난 자본을 축적하며 노동과 자본으로 더 많은 소득을 획득하여 자녀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자녀가 막대한 자본자산을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 직업까지 가지게 되면, 불평등은 2세대 이상 세습될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Rognlie(2014), Bonnet, Bono, Chapelle & Wasmer(2014), Stiglitz(2015) 등은 피케티가 (생산적) 자본과 자산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자산가격의 상승이나 자본이득의

그림 5. 소득(균등화가처분소득) 분위별 평균 저축 성향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증가가 β값 증가의 주된 요인이고, 생산과 관련된 자본은 β값 상승에 기여하지 않으며 비생산적 자본에 대한 지대(rent)가 β값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고 보았다.

정책적 요인을 차치한다면, 자산 축적이나 자산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은 저축, 자산가격 상승, 상속과 증여 등으로 볼 수 있다. 저축 불평등은 잠재적으로 거대한 부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에서는 자산 불평등이 확대된 1980년대 이후 중산층의 저축률이 크게 하락하였다. 일반적으로 저축률은 자산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Saez & Zucman 2014).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중반 이후 하위 소득분위의 저축률이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상위 소득분위는 저축률 감소폭이 크지 않았다. 상위 소득자들의 경우, 저축을 통한 자산 축적 메커니즘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 축적에서 자산 가격 상승에 의한 요인이 커지고 있다. 주상영(2015)은 한국에서 β값이 높게 나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축률이 높게 유지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본의 상대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주요국의 국부 상승 요인을 저축에 의한 요인과 자본이득에 의한 요인으로 분해했을 때, 실질 자본이득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의 경우 미국, 일본, 프랑스보다는 높고 영국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Lee & Yoon(2015)도 한국의 β값을 저축에 의한 증가분과 자본이득에 의한 증가분으로 분해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1966~2013년 자본 성장률은 민간 부문 기준으로 연평균 8.8%이고, 저축에 의한 성장률은 연평균 3.9%, 자본

이득에 의한 성장률은 연평균 4.8%로 자본이득에 의한 자본 성장이 전체 성장의 55%를 차지하였다. 앞에서 보았듯이 β값이 높아지는 시기에 저축률이 정체-하락하였다는 것은 자산 축적이 저축보다는 자본이득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속과 증여, 인적 자본 형태로의 이전은 상위계층의 자산 집중을 심화하고 매우 많은 빈곤층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상속·증여가 자산 축적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성장률(저성장 사회에서는 상속·증여의 비율이 높아짐), 상속·증여에 대한 사회적 선호, 연금 시스템의 관대성 등에 따라 시간과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피케티는 연간 상속 및 증여액의 국민소득 대비 비율을 통해 상속 및 증여가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국민소득 대비 상속·증여 비율은 19세기 전체와 20세기 초까지 국민소득 대비 20~25%에 이르렀다가, 이후 1950년대에 5% 미만으로 하락하였고, 다시 상승하여 2010년에는 약 15% 수준으로 나타났다. Alvaredo, Garbinti, & Piketty(2017)도 1900~2010년 유럽에서 총자산 축적의 상속 비율이 70%를 넘었다고 밝혔다. 1914~1945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1970~1980년에는 40%까지 떨어졌다가 2000~2010년 50~60%로 상승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국민소득에서의 상속·증여 비율도 1900년대에는 16~24%였으나 전후 10%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1980년대 이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연구를 보면, 전체 가계 자산에서 상속·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5% 수준에 머물고 있다. 홍민기(2017)는 가계 자산 중 상속·증여 자산의 비율은 20% 수준이고[3] 10억 원 이상의 고액 증여나 상속을 받아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0.5%, 30년 누적 22만 8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백가현, 홍백의(2015)도 가계 자산을 상속·증여의 현재 가격 기여분과 가구 기여분으로 분해한 결과, 상속·증여의 현가는 전체 부의 23%, 가구 기여분은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김낙년(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상속액 규모는 1970년대에 국민소득의 5.7%였다가 1980년대에 5.0%로 바닥을 친 후 계속 높아져 2010년 이후에는 8%로 높아졌다.[4] 과세 자료에 따르면, 연간 상속액은 국민소득의 2%대에서 완만하게 상승하였다. 여기에 연간 증여액을 더하면 2.8~3.7%로 높아지고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양자의 간격이 벌어진 데서 알 수 있듯이 연간 상속액보다는 증여액이 더

3) 노동패널 2001년(4차 자료)부터 2015년(18차 자료)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별로 계산한 자산수익률을 누적적으로 곱하여 누적 자산수익률을 계산하고, 이에 대해 가구별 근로소득, 소비, 재산소득, 증여와 상속(이전소득) 정보를 이용하여 생애주기 자산과 증여 자산을 계산하였다.

4) 간접적인 방법은 Piketty(2011)에서 활용한 방식으로 자산/소득 비율인 β값, 성인 사망률(mt), 증여를 감안한 사망자와 살아 있는 자의 1인당 자산 비율 등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빨리 증가하였다. 추정 수치와 세금 수치의 차이는 탈세의 문제, 공시지가와 시가의 차이, 비영리법인 자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3. 자산 격차 현황과 추이

자산은 일반적으로 상위층으로의 분포 집중도가 매우 큰 특징이 있다. 따라서 상위 자산 격차 또는 자산 불평등은 지니계수와 같은 지표보다는 상위계층의 자산점유율 등으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도 〈표 1〉에서와 같이 자산의 경우, 상위 10%의 집중도가 소득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난다. 하위 90%에서는 소득과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즉, 자산은 상위 10%의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실물자산의 상위 10% 점유율이 금융자산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공식적인 가계조사를 기초로 한 자산 격차 지표를 보면, 한국의 자산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6]에서 상위계층으로의 자산 집중도를 보면, 한국의 자산 집중도는 국가 복지에 의한 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하여 자산 기반 복지가 강한 스페인, 이탈리아 등과 유사한 수준이다.

한국의 자산 불평등 추이를 보면, 외환위기 이후 1998~2005년 사이에는 증가하다가 2005~2006년 이후부터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순자산의 지니계수, 순자산의 상위 10% 점유율, 순자산의 로렌츠곡선 추이 등에서도 확인되며,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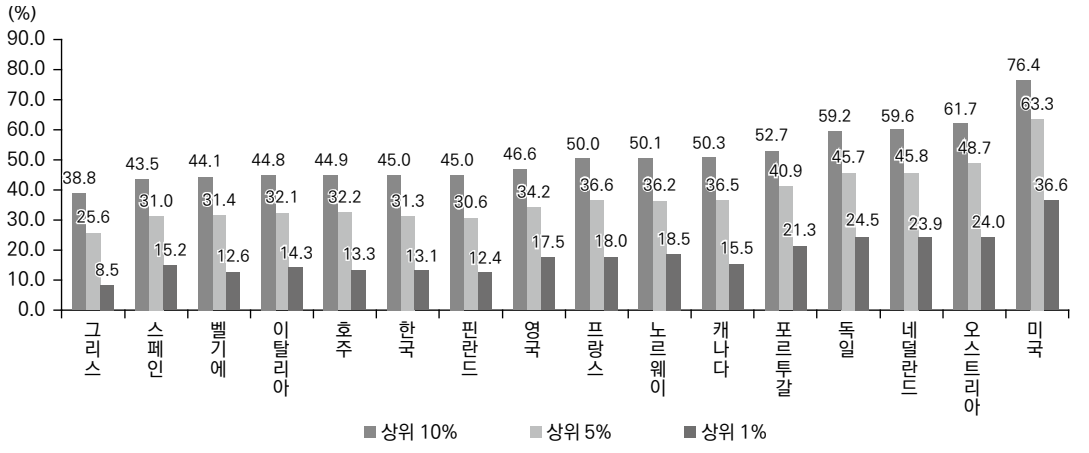
표 1. 순자산 분위별 점유율(2017년)

(단위: %)

	실물자산	금융자산	부채	순자산	가처분소득	경상소득
p10	0.5	1.1	4.4	-0.2	1.1	1.2
p20	0.5	2.6	2.0	0.8	2.6	2.5
p30	1.7	4.4	4.3	2.0	4.2	4.1
p40	3.6	5.3	7.0	3.4	5.8	5.7
p50	5.0	6.5	7.1	5.0	7.4	7.3
p60	6.9	7.9	8.1	7.0	9.1	9.0
p70	9.3	9.7	9.5	9.3	10.9	10.9
p80	12.7	11.7	11.2	12.7	13.4	13.4
p90	17.7	16.9	15.3	18	17.1	17.1
p100	42.2	33.9	31	42.1	28.4	28.8
상위 5%	29.2	21.6	20.3	28.8	17.6	17.9
상위 1%	11.6	7.8	7.6	11.3	6.0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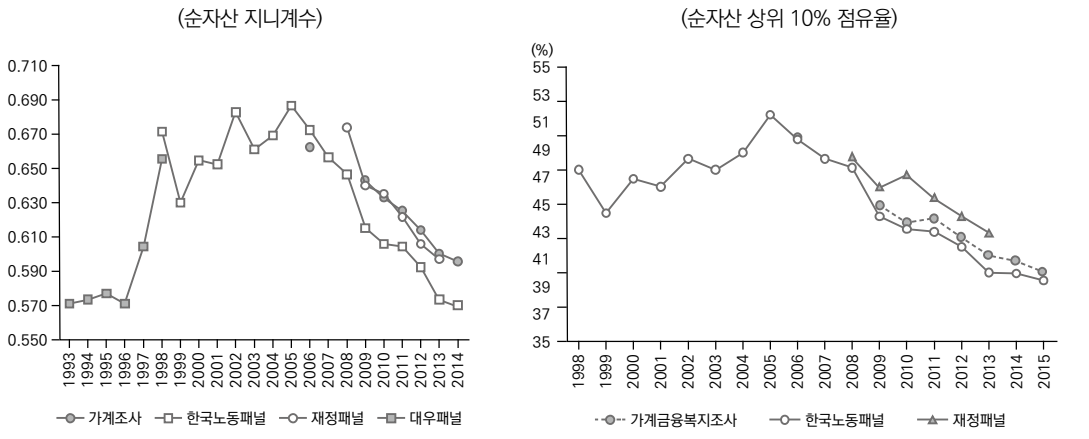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 6. 상위 계층으로의 자산 집중도 국제 비교(순자산 상위 1%, 5%, 10% 점유율, 2012년 기준)



자료: OECD Stats.

그림 7. 순자산의 지니계수와 순자산 상위 10%의 점유율 추이



자료: 전병유 외(2016), 『한국의 불평등 2016』의 [그림 2.3]을 최근 자료까지 연장한 것임.
통계청, 가계조사는 가계자산조사(2006), 가계금융복지조사(2010-2016년);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패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전병유 외(2018) [그림 3-5]와 [그림 3-6]에서 재인용.

국노동패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등 모든 조사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자산 불평등 지표 변화의 원인에 대한 실증 연구가 아직 축적되지는 않았지만, 2000년대 초반의 부동산 자산 가격 급등과 2006년 이후 소득 대비 부채 비율(DTI: Debt to Income) 규제 등의 부동산

표 2. 국민대차대조표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산 규모 비교

(단위: 조 원)

	국민대차대조표 (2013년 말, A)	가계금융복지조사 (2014년 3월, B)	B/A
총자산	7,586	6,137	0.81
비금융자산	4,912	4,494	0.91
금융자산	2,674	1,643	0.61
순자산	6,366	5,034	0.79
부채	1,220	1,103	0.90

자료: 1)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
2)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규제 도입,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 가격 안정화로 자산 불평등이 완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왜 한국의 공식 통계에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자산 불평등 정도에 비해 자산 격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가? 그 원인으로 자영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국가 복지보다는 자산 기반 복지의 성격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 상속과 증여 등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계 대상의 조사 자료가 가지는 한계도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국민대차대조표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나타난 자산 규모를 비교해 보면, 가계조사로 파악되지 않는 자산 규모가 1200조~13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순자산은 가계조사의 경우 국민대차대조표의 79% 수준에 불과하다.

김낙년(2016)은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최상층의 금융자산을 파악하지 못하는 결함 때문에 자산 불평등을 과소평가하게 된다고 지적한다.[5]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2006년 이후 자산 불평등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과세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할 경우 자산 불평등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즉,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자산 중에서 특히 최상층의 금융자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부의 불평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보고, 국세 자료인 상속세 자료를 활용하여 유산승수법(estate multiplier

5)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재무부가 1992년부터 조사하고 있는 소비자금융조사(SCF: Survey of Consumer Finance)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작성하는 미국 경제의 자금계정 흐름(FFA: the Flow of Funds Accounts) 사이에 안전자산(현금과 채권)의 격차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CF는 FFA의 50~60% 수준만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SCF에서는 현금이 조사되지 않고, NPO(non-profit organization)들은 현금 자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한다. 채권의 경우에도, SCF에서는 액면가로 보고하기 때문에 FFA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자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고소득층의 대표성이 여전히 약한 것으로 보이고, 금융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고하지 않는 문제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 금융자산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과 관련해 국민계정에는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이 포함되는 반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이 부분이 조사되지 않는 것도 한 요인일 것이다. 미국 연금계정의 경우 상위 1%와 하위 5%를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한 금융자산이고, 다른 금융자산은 상위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전병유, 2018).

method)으로 2000년 이후 개인의 자산 분포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한국의 부의 불평등은 영미 국가보다는 낮았지만 프랑스를 포함한 대륙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4. 나가며

자산은 소득과 달리 상위층으로의 집중도가 매우 강한 분포상 왜도가 심한 특징이 있다. 따라서 조사 자료에서는 상위층의 경우 얇은 꼬리 형태의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표본변동성(sampling variability)이 매우 크고, 무응답이나 조사 참여 거절이 자산 수준에 따라 비례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자산 격차 연구에서는 행정통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국가별로 행정 자료의 사정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다. 소득세 자료가 19세기부터 잘 구축되어 있는 영국에서는 소득자본화 방법(income capitalization method)을, 상속세 자료가 잘 구축되어 있는 프랑스에서는 유산승수법(the estate multiplier method)을 사용한다. 소득자본화 방법은 자본소득 흐름으로부터 자산의 분포를 구하는 방법이지만, 자산 범주별로 고정된 수익률을 가정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유산승수법은 상속세 자료에서 사망자의 자산을 추정하여 살아 있는 사람의 자산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사망 확률이 임의적이라면, 사망자의 자산으로 살아 있는 사람의 자산을 바로 추정할 수 있지만, 사망률이 성, 연령, 계층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망률(mortality rate)의 역수를 적용하여 살아 있는 사람의 인구수를 추정하고 사망자의 자산에 이 승수를 적용하여 살아 있는 사람의 자산 분포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자료나 부동산 과세 자료가 개인·가구별로 잘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는 소득·자산 구간별 액수는 공개되고 개인·가구별 미시 자료 파일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Piketty & Saez(2003) 등에서 시도된 소득자산화 방법을 통한 자산 불평등 추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개인·가구의 정보 보호를 확실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전제하에 개인·가구별 미시 과세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전병유, 2018).

다만, 이 글에서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자산 중 상당 부분이 과세 자료에서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 자산 축적이나 자산 격차에 미치는 영향 요인 중에서 저축이나 상속·증여보다 자본이득이나 자산가격 상승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 그럼에도 빈곤층의 낮은 저축률이 자산 격차의 한 원인이라는 점, 상속·증여의 효과도 실태조사보다는 과세 자료에서 더 잘 파악되며 과세 자료에서도 파악되지 않는 상속·증여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이다. 따라서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산에 대한 파악과 과세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자산가격의 안정과 불로소득으로서의 지대에 대한 과세, 빈곤층의 저축과 자산 형성 기반 확충,

상속·증여에 대한 엄밀한 파악과 과세 방안 등을 정책 과제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낙년. (2016). 한국의 부의 불평등, 2000-2013: 상속세 자료에 의한 접근. 경제사학. 62, 393-429.

백가현, 홍백의. (2015). 세대 간 이전이 부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연령,소득집단별 영향력 분석-. 사회보장연구, 31(3), 93-117.

이병희, 강병구, 성재민, 홍민기. (2015). 경제적 불평등 실태와 정책 대응. 세종: 노동연구원

장지연, 김근주, 손연정, 윤자영, 박은정, 정영훈,...정세은. (2018). 사회적 위험과 격차 심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15-01.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병유. (2018). 자산불평등. 유경준 외 (편), 소득양극화 개선 방안. KDI 기타보고서.

정준호, 전병유. (2017). 국가 간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의 자산불평등-한국, 미국, 스페인 주택자산의 불평등 효과를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51(2), 149-164.

주상영. (2015). 피케티 이론으로 본 한국의 분배 문제. 경제발전연구, 21, 21-76.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패널.

홍민기. (2017). 자산 불평등과 세대간 이동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Alvaredo, F., Garbinti, B., & Piketty, T. (2017). On the Share of Inheritance in Aggregate Wealth: Europe and the USA, 1900-2010. *Economica*, 84(334), 239-260.

Dynan, K., Skinner, J., & Zeldes, S. (2004). Do the rich save mor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2(2), 397-444.

Bonnet, O., Bono, P. H., Chapelle, G., & Wasmer, E. (2014). Does housing capital contribute to inequality? A comment on Thomas Piketty's Capital in the 21st Century. Sciences Po Economics Discussion Papers, 7, 12.

Kumar, R. (2016). Personal Savings from Top Incomes and Household Wealth Accumulation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45, 224-240.

Lee, W., & Yoon, Y. (2015, June). Capital in South Korea: 1966-2013. In conference on Social Welfare, Justice and Distribution: celebrating John Roemer's contributions to economics, political philosophy and political science.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UK, June (pp. 19-20).

Milanovic, B. (2016). *Global Inequality: A New Approach for the Age of Globalization*. Cambrige: Harvard University Press.

Piketty T. (2011). On the Long-Run Evolution of Inheritance: France

1820-2050.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61(3), 1071-1131.

Piketty, T. (2014).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21세기 자본*(장경덕 옮김). 파주: 글항아리.

Piketty, T., & Saez, E. (2003). Incom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1913-1998.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8(1), 1-41.

Piketty T., Postel-Vinay, G., & Rosenthal, J. (2014). Inherited vs Self-made wealth: theory and evidence from a rentier society(Paris 1872-1927). *Exploration* in *Economic History*, 51, 21-40.

Rognlie, M. (2014). A note on Piketty and diminishing returns to capital. http://www. mit. edu/~mrognlie/piketty_diminishing_returns.pdf

Saez, E., & Zucman, G. (2016). Wealth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since 1913: Evidence from Capitalized Income Tax Data.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1(2), 519-578.

Stiglitz, J. E. (2015). New Theoretical Perspectives on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among Individuals: Part I. The Wealth Residual, NBER WP No. 21189.